

동일본대지진 이후 정부개발원조 예산삭감을 둘러싼 일본사회 내의 갈등

정 기 숙*

(e-mail: Kisuk.jeong@gmail.com)

目次

1. 연구 목적과 방법
 2. 일본의 ODA특징과 일본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
 3. 일본 정부의 ODA예산삭감과 이를 둘러싼 논쟁
 4. 국익에 바탕을 둔 일본의 ODA 이념
 5. 결론: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
-

1. 연구목적과 방법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쪽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력한 대지진은 거대한 지진 해일과 함께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했다. 이와테현 (岩手県), 미야기현 (宮城県), 후쿠시마현 (福島県) 등 일본 동북부 연안지역 약 600킬로미터가 지진 해일에 초토화되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가 노심용융¹⁾으로 폭발하면서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수상 간 나오토 (寬直人) 는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이래, 일본이 닥친

* 일본 上智大学, Institute of Global Concern, 연구원

1) 노심용융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원자로의 노심(core) 냉각이 불충분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또는 노심의 이상 출력상승에 의해 노심 온도가 상승하여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이다.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재난이다”며 대재해에 직면한 참담함을 드러냈다²⁾. 그 피해규모는 과거 일본이 겪어왔던 어떤 재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대재앙이다. 일본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18,483명, 부상자수 5,951명, 피난자수 46만명, 붕괴 가옥 수는 933,520동에 달해 피해총액 16조 9천억 엔에 이른다³⁾.

대재해 발생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 피해지역의 긴급구제에 나섰다. 간 일본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⁴⁾를 세우고, 2010년도의 정부예산 예비비로부터 678억 엔, 2011년도의 예비비로부터 503억 엔, 합계 1,182억 엔을 투입하여 피해자 수색과 구조, 피난자의 지원과 라이프 라인의 수복 등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총동원해 긴급구제에 나선 것이다.

한편, 최대 38미터의 지진 해일이 일본연안을 휩쓰는 영상이 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생생히 보도되면서, 각국의 정부, 단체, 국민들은 깊은 위로와 함께 재해구제에 대한 적극 지원을 표명했다. 미국(GDP 15조 달러, 2011년)에서 투발루(GDP 3,500만 달러, 2011년)까지 국가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세계가 일본 국민이 겪는 재해고통을 위로하고자 힘을 보탤다. 국제개발센터가 2011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약 1년 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은 174개국·지역으로부터 합계 약 1,640억 엔 이른다. 또한 99개국·지역으로부터 합계 160건의 인적 지원과 73개국·지역으로부터 식료·음료 104건, 지원물자 158건, 연료 14건 등 305건의 물적 지원도 받았다⁵⁾.

이번 대재해가 국제협력⁶⁾의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일본의 대참사에 물적·인적자원을 보내준 174개국·지역 중에서 119개국·지역이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ODA)⁷⁾의 수혜국이라는

2) CNN Wire Staff (2011.3.14) “Anxiety in Japan Grows as Death Toll Steadily Climbs”, CNN.

3) 警察庁 (2015.1.9) 「東日本大震災について被害状況と警察措置」.

4) 2011년 6월 26일 「동일본대지진부흥기본법」이 책정되면서, ‘긴급재해대책본부’는 동일본대지진부흥대책본부’로 바뀌었고, 2012년 2월에 ‘부흥청’으로 재편되었다.

5) 国際開発センター(2013) 『東日本大震災への海外からの支援実績のレビュー調査』, pp.18-46.

6)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협력은 정부, 조직, 단체, 기관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부개발원조(ODA)는 국제협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7) OECD/DAC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개발원조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향상을

점이다. 즉, 지원국 전체의 약 7할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과거 일본에게 받은 ODA에 보답하기 위해 재해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했으며, 이들 중 35개국은 이른바 최빈국으로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다⁸⁾. 그 뿐만 아니라 정세 및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들도 일본의 대참사를 위로하며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1977년 이래 원조공여 국으로서 ODA를 제공해 온 일본이 2011년에는 ‘긴급인도지원’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⁹⁾. 사실,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과 한신·이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재해가 그 동안 일본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해외와의 공감(sympathy)과 연대(solidarity)를 강화시키므로써 일본 국민의 ODA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확산시키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대재해 후에 닥친 현실과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원은 국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일본 국민간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논쟁의 핵심은 대재해 복구비용이 23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가, 혹은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국제협력 예산의 증액을 둘러싼 대립이다. 즉, 전례 없는 대재해 발생으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와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선진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ODA를 지속적 및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세계가 보여준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대재해 이후 일본이 닥친 현실은 너무나 혹독하며 ODA의 지속은 자국민을 더욱 압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의 재해복구·부흥을 위하여 ODA를 삭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목적으로 공적 기관에(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의해 제공되는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증여율 25%이상) 및 국제기관의 출자(出資)·거출(抛出)등을 말한다.

<http://www.oecd.org/dac/stat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Definition>

8) 国際開発センター(2013) pp.18-46.

9) 国際開発センター(2013) pp.47-48.

10) 中村(2012)「海外からの共感と連帯」『垣根のない連帯と共感』 pp.8-12.

본고의 목적은 대재해 이후 가중되고 있는 일본 사회 내의 ODA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의 ODA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초점과 고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절에서는 대재해로 일본이 입은 피해규모와 세계 각국의 지원을 설명하고 대재해 통해 얻은 '세계와의 연대' 형성이 그 후 일본의 ODA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에 주목하는 본고의 연구 과제를 명확히 한다. 제 2절에서는 일본의 ODA 역사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일본 ODA의 특징과 일본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본 절에 해당하는 제 3절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한 거액의 예산마련이 불가피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각에 제안한 ODA 삭감 예산안과 이를 둘러싼 찬반여론의 논쟁을 들여다보고, 제 4절에서는 ODA 논쟁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배경으로서 '국익'을 강조하는 일본정부의 ODA 이념과 이것이 일본 국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제 5절에서는 앞 절에서 고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ODA 논쟁이 한국의 ODA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2011년도 제1차 보정예산의 전후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ODA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 내각부와 외무성, 그리고 리서치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2. 일본 ODA의 특징과 일본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

ODA의 주요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지만, 실제의 동기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 전후(戰後)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대외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외교정책상의 중요한 역할로서 ODA를 실시해 왔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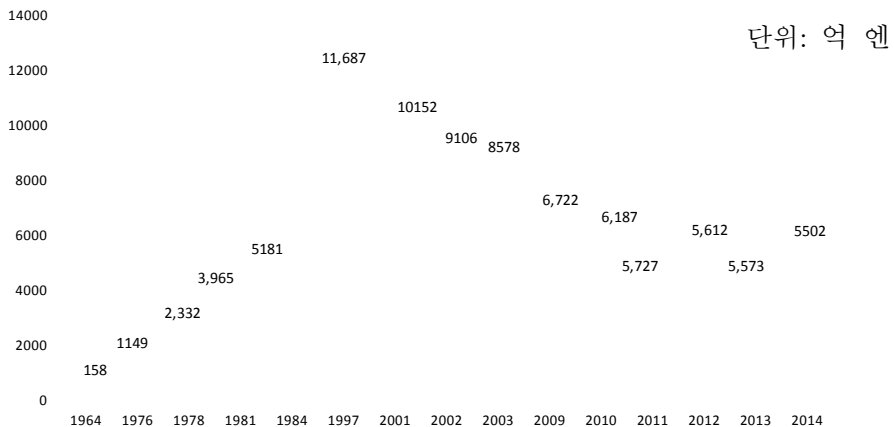
일본의 ODA는 1954년 콜롬보 계획(Colombo Plan)¹²⁾의 가맹으로 시작되었

11) 日本 外務省(2006)『政府開發援助(O DA)白書』, p.4

12)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이란, 전후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조직된 국제기관이다.

다. 초창기의 ODA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이 주를 이루었다¹³⁾. 이후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일본이 고속경제성장기에 접어들어서면서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ODA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적인 ODA의 양적 확대는 198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미국과의 경제·무역마찰이 격화된 것을 반영하여, ‘흑자감소’, ‘자금환류’와 같은 슬로건 하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ODA공여국이 되었다¹⁴⁾.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ODA 예산은 계속적으로 삭감되게 된다.

<표1> 일본의 ODA 예산 추이 (1964-2014)



출처: 日本外務省 정부개발원조(政府開發援助) 웹사이트(2015년 6월3일 검색)

일본 ODA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촉진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여론과 국제적인 동향에 반응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왔다

주로 기술협력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제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고, 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명칭은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이다.

13) 日本 外務省(2006) p.5.

14) 日本外務省 (2004)『日本ODA白書—日本のODA50年の成果と歩み』.

는 점이다. 유럽 국가들이 초기부터 명확한 원조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원조를 개시한지 약 40년 후인 1992년에 처음으로 ODA대강(旧·政府開發援助大綱)을 각의결정 하였다¹⁵⁾. ODA 대강은 일본의 중장기적인 국제협력 정책을 체계화 한 것이지만, 유럽국가와는 달리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협력의 예산책정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이 외무성을 시작으로 하는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¹⁶⁾.

또한 정부주도 및 행정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일본 국민이 가진 ODA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적다는 점도 일본 ODA의 특징이라고 하겠다¹⁷⁾. 그 배경으로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의 ODA가 전후 배상을 원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로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는 점과¹⁸⁾ 아프리카 난민 및 이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 그리고 ODA 수혜국들의 대부분이 다른 경제·사회 환경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 친근감을 느끼기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국민이 가진 ODA에 대한 관심은 서구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지만, 오바마(小浜)에 따르면 ODA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비교적 높았던 시기는 1989년으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공여국 세계 1위로 등극했던 해이다¹⁹⁾. 그 시점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ODA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도하면서 ODA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국민들에게 빠르게 침투되었지만 보도의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ODA에 대한 관심은 곧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으로 바뀌게 되었다²⁰⁾. ODA 예산액으로 보면 1997년을 최고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2010년도 예산액은 1997년도의 2분의 1까지 떨어졌으며, 각국 비교에서도 과거 세계 1위였던 ODA 실적 액은 세계 5위로

15) 日本 外務省(2004) 『政府開發援助(ODA)白書 2004年版～日本のODA50年の成果と歩み』.

16) 鄭基淑(2009) 『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新しい国際協力のあり方—途上国の地域發展と自治体間の国際協力』 富士ゼロックス 小林節太郎記念基金2009年度研究助成論文, pp.11-19.

17) 塚本(2004) 「我が国のODA世論の把握とその調査方法についての一考察—インターネットニュース記事選考分析から得られた我が国国民のODAに対する評価」 『外務省調査月報』 No.4. p.81.

18) 日本 外務省(2006) p.4.

19) 小浜(1992) 『ODAの経済学』 日本評論者, pp.45-60.

20) 塚本(2004) pp.78-79.

전략했다 (표1 참조). 일본의 ODA 예산액이 18년 연속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정부주도로 실시되어 오던 ODA 양적 확대의 피로와 버블경제 붕괴 후의 경제 불황과 재정악화 등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ODA 대한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 혹은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일본 ODA의 특징과 일본 국민의 낮은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일본 정부가 ODA예산을 더욱 삭감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재해 이후 거세진 ODA예산 삭감 논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재해 이후의 ODA예산삭감과 이를 둘러싼 논쟁

일본 정부는 긴급지원 외에도 지진피해 복구 및 주택건축, 도로, 항만정비, 산업 활동의 재생, 원자력 피해의 부흥 및 재생, 피해자의 생활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이를 위한 예산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부흥기본방침’에 따르면, 재해 복구 및 부흥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으로, 이 기간 동안의 사업규모는 국가·지방을 합쳐 적어도 23조 엔을 넘는다²²⁾. 이것은 일본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지원금 1,640억 엔의 약 140배에 달하는 예산규모이다.

재해복구를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ODA를 둘러싼 논쟁을 직접적으로 점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발표한 ODA 예산 삭감안이었다. 2011년 4월 6일, 전 외상(外相) 오카다(岡田克也)가 이끄는 민주당 ‘지진재해복구·부흥검토위원회(地震災害復旧·復興検討委員会)’는 2011년도 제 1차 보정예산의 재원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ODA예산의 2할인, 약 1,145억 엔을 삭감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내각에 제출했다²³⁾. 무너진 주택철거와 가설 주택 건설 등에만 4조엔 이

21) 田中(2010) 「国際協力と国民的合意形成」『季刊 政策・経営研究』 p.81.

22) 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2011.7.29)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基本方針」.

23) 朝日新聞(2011.4. 7) 『「ODA削減し復興財源に」民主党、内閣に申し入れ』 웹사이트, <http://www.asahi.com/special/10005/TKY201104060573.html>.

상의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요 정책을 재고하는 것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그 대상이 된 것이 ODA이었던 것이다²⁴⁾. 민주당이 ODA 예산 삭감안을 내각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자 그 당위성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확산되었다.

민주당의 ODA 예산 삭감안에 가장 먼저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일본 NGO 단체들이었다. 일본국내 최대 규모의 NGO 네트워크인 「動く→動かす(소속단체: 61단체)와 국제협력 NGO센터(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NIC, 소속단체: 96단체)는 ODA 예산의 2할 삭감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4월 6일과 8일에 각각 발표하고 삭감안의 재고와 당초예산의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다²⁵⁾.

ODA 2할 삭감 예산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1) 세계 빈곤문제와 재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직면한 과제가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과제라는 점, 2) 대재해로 인해 확인된 세계와의 연대를 단절해서는 안 되며, 국제공헌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일본이 세계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점, 3) 일본의 ODA는 1998년 이래 13년간에 걸쳐서 삭감해 오고 있으며, 이에 더해 2할을 삭감할 경우 도상국의 빈곤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²⁶⁾. 다시 말해, 이들 단체들은 인간의 안전보장과 세계와의 연대의 측면에서 ODA 삭감은 재해부흥의 재원확보의 수단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 여야당과 각계 주요 인사들도 민주당의 ODA 삭감안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자민당(19명), 민주당(5명), 공명당(2명), 기타 정당(4명) 등의 초당파 의원들은 14일 오전에 국회 내의 회의를 열고, 1차 보정예산안의 재원으로서 검토된 ODA 삭감에 반대하는 안을 내각에 제출했다. 삭감된 ODA 예산은 재해복구예산의 1할에도 미치지 못하며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해 충분히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ODA를 삭감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즈모토(松本剛明) 외상도 정부 ODA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4) 福嶋(2011.6)「4兆円規模となった平成23年度第1次補正予算—課題を残した復興財源の確保」『立法と調査』No.317, pp.26-32.

25) 動く→動かす・国際協力NGO センター(2011.4.5)『震災救援・復興と世界の貧困解消の両立のために「政府開発援助(ODA)」予算の維持を強く求めます!』.

26) 動く→動かす・国際協力NGO センター(2011.4.5)

2011년 4월 13일에 열린 중원외무위원회(衆院外務委員会) 자리에서 “ODA를 잘 이해하고 있을 의원으로부터 삭감의 의견이 나온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ODA 예산의 2할 삭감을 외무성에 요청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전 외상 오카다 간사장이었음을 염두 한 발언이다²⁷⁾. 한편 일본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일본무역회(日本貿易會) 우즈다(檜田松莖) 회장도 20일 오전에 개최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협력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해복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ODA를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²⁸⁾.

결국 NGO단체와 정부 여야당을 시작으로 한 사회각계로부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민주당은 당초 밝힌 1,145억 엔에서 500억 엔으로 제1차 보정예산에서의 ODA 삭감액 폭을 축소할 방침을 2월 15일에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500억 엔 삭감된 ODA 예산안은 2월 22일에 각의 결정되었고, 재해 발생 48일 후인 4월 28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5월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양해를 부탁하고 있지만, ODA 예산삭감안이 가결·성립된 데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화 되었다.

ODA 삭감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NGO 단체들은 재차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AIDS & Society 연구회와 아프리카 일본협의회(Africa 日本協議會)는 항의성명을 통해 삭감된 ODA 예산 501억 엔 중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대책기금 등의 거출금 159억 엔이 전부 삭감되었으며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해야 하는 역할을 일부 방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²⁹⁾. 니시다(西田) 유엔 대사도 5월 14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론되고 있는 ODA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일본이 해온 국제공헌은 ODA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며, 대폭 삭감될 경우 외교상 많은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ODA 삭감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³⁰⁾. 한편 마즈모토(松本剛明) 일본 외상은 ODA가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원부흥 재원으로로서 삭감된 500억 엔을

27) 日本經濟新聞(2011.4.22) 『外相、ODA削減「大變残念」』.

28) 日本經濟新聞(2011.4.20) 『貿易會會長、ODA予算「震災後も削るべきではない」』

29) エイズ&ソサエティ研究会議・アフリカ日本協議會(2011.4. 25) 『2011年度第1次補正予算に関する声明震災復興と世界の感染症対策の両立を＝世界エイズ・結核・マラリア対策基金への拠出見送りの再考を求めます』.

30) 弟子(2011.4.15) 『西田国連大使「ODA削減なら外交に支障」』『日本經濟新聞』.

2011년도 2차 보정예산 때 부활을 요구할 생각을 내비쳤다.

그러나 ODA삭감에 대한 NGO단체와 정부여야당 등의 거센 반발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과 큰 온도차이가 있었다. 2011년 대재해 이후 실시된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4%, “지금 수준으로 만족 한다”가 47.4%, “가능한 삭감해야 한다”가 17.8%, “증지해야만 한다”가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도에 실시한 결과에 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의 비율이 31.5%에서 27.4%로 4.1% 하락했고, “지금 수준으로 만족한다”는 43.1%에서 47.4%로 상승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ODA 삭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삭감에 찬성한다”가 38.5%, “더욱 삭감해야 한다”가 27.9%, “삭감에 반대 한다”가 33.6% 로, 전체 응답자의 66.4%가 ODA 삭감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또한, ‘삭감된 ODA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부활시킬 필요는 없다”고 삭감지지 의사를 밝혔다³²⁾.

이러한 논쟁을 의식하여 일본 정부는 ODA 예산의 소폭 삭감이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린다. 표1의 ODA 예산 추이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의 ODA는 적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2월 24일에 각의 결정된 2011년도 일반회계 ODA예산은 정부 전체에서 전년도 대비 7.4% 감소한 5,727억 엔에 머물렀으며³³⁾, 2012년도의 ODA예산도 115억 엔, 즉 전년도 대비 2% 삭감되어 5,612억 엔 계상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39억 엔 삭감, 2014년에도 71억 엔 삭감되는 등 소폭이지만 계속적으로 ODA를 삭감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ODA 삭감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절충시킨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국민들의 ODA지지율은 더욱 하락했지만 대재해 이후의 ODA를 둘러싼 논쟁이 이전과 다른 점은 ODA를 단순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지지해 왔던 ODA지지자들에게 ODA의 가치와 의의를 재고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31) 日本經濟新聞이 2011년 5월 23~24일에 걸쳐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를 참조,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FK2402U_U1A520C1000000/?d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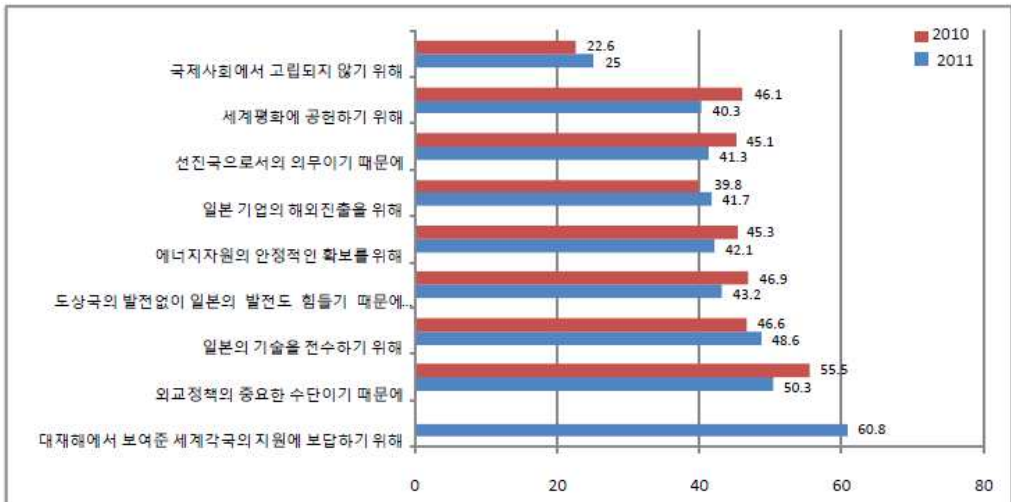
32) Yahoo 리서치가 7,65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조사기간:2011년5월24일~6월3일.

33) 柴崎(2011.2)

「平成23年度政府開發援助予算～限られた予算の中での戦略的なODAを目指して～」『立法と調査』No.313 p.53.

이것이 ODA를 지지하는 새로운 이유 및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11년도 여론조사에서도 눈에 띈다. ‘ODA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27.4%의 지지자들 중 60.8%가 “대재해에서 받은 세계 각국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ODA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표2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ODA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기존에 있는 대다수의 ODA 반대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ODA를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이다.

<표2> 일본 국민이 ODA를 지지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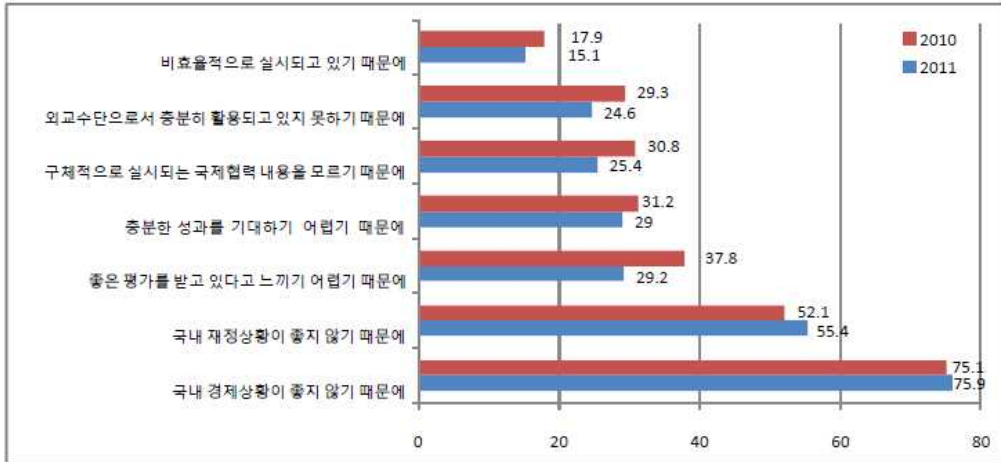
출처: 日本 内閣府(2011) 「平成23年度世論調査」

일본의 누적채무가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200%를 초과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고 일본 자국민의 사회복지와 안정을 위해 증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재고가 크게 의논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세금을 투입하는 ODA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³⁴⁾. 위의 여론조사에서도 ODA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75.1%

34) 누적채무 국제비교는OECD “Economic Outlook 94”을 참조(2013.11).

가 “일본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52.1%가 “국내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이라고 답해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일본 국내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ODA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일본 국민이 ODA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출처: 日本內閣府(2011) 「平成23年度世論調査」

그러나 대재해가 ODA를 지지하지 않은 여론을 형성한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3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의 조사에서 경제 불황과 재정악화를 이유로 ODA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52.1%, 75.1%로, 대재해 발생 후인 2011년도의 55.4%, 75.9% 와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대재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ODA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대재해가 ODA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대재해로 인한 일본 내 위기 상황이 기존의 ODA 반대여론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국익에 바탕을 둔 일본의 ODA 이념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예산삭감의 대책마련으로서 일본 정부는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익추구’가 일본 ODA의 목적임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 각의 결정된 ODA대강(政府開發援助大綱)에서 ODA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이것을 통해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일본 외무성의 공식 발언과 공적인 문서에서도 ODA가 일본의 국익과 직결된 것임이 자주 언급되었다³⁵⁾.

그러나 2003년의 ODA대강이 발표된 지 10년 남짓 경과했지만 ‘국익’을 강조한 개념이 일본 국민의 ODA 인식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010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ODA발전방향에 관한 검토 보고서(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報告書)’는 ODA 거출이 국익에 연계된다고 하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⁶⁾. 이 점에 대해서 北野(2006)는 양국 간의 국제협력으로 얻어지는 국익은 상대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익을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또한 국제협력에 의해 얻어지는 국익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국익에 초점을 둔 ODA는 국민들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 한다³⁷⁾. 즉, ODA를 통해서 얻어지는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료한 관련성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ODA의 목적이 국익추구에 있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이해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익’이 일본의 ODA 목적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ODA 발전방향에 관한 검토’의 최종보고서에서도 일본 국민들의 이해가 저조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서 ODA가 일본의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35) 예를 들어, 日本 外務省『2004年版ODA白書』에서 타무라(町村) 외무대신의 들어가는 말, 日本 外務省『2010年版ODA白書』에서 히라바야시(平林)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의 말머리 등.

36) 日本外務省(2010)『開かれた国益の増進—世界の人々とともに生き、平和と繁榮をつくる—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p26.

37) 北野充(2006)「戦略的なODAをどう実現するか」『GRIPS開発フォーラム』, GRIPS.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었다³⁸⁾. 그 연장선으로 2015년 2월에 새롭게 각의 결정된 ‘개발협력대강(開發協力 大綱)’에서도 ODA의 목적이 일본의 ‘국익’ 추구에 있음이 직접적으로 명기되었다. 개발협력대강에 따르면 ODA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 “그러한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예측하기 쉬운 국제환경의 실현 등의 국익확보에 공헌 한다”는 것이다³⁹⁾. 새로운 대강은 구 대강에서 밝힌 ‘국익’ 추구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DA와 국익의 연관성이 불명확하고, 국익강조가 ODA의 인지도 개선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국익강조는 그 유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익우선의 ODA 목적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DA의 지지층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자국의 이익추구가 ODA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명분이라면 대재해로 고통 받는 일본의 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자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움보다 자국의 발전과 안정이 선결과제라고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대재해 후에 거세진 ODA 예산삭감 여론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재해 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지원이 ODA의 지지자들에게 높게 평가되고, 이것이 ODA를 지지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지하는 여론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국익을 이유로 ODA를 반대하는 여론이 당위성을 얻고 절대 다수의 여론이 위압적으로 일본 정부에 ODA 삭감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ODA 지지자들을 위축시킨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일부 ODA 삭감 지지자들은 NGO단체들과 여야당 의원들이 ODA 삭감에 반대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 단체와 의원들을 국익에 반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ODA 삭감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⁴⁰⁾.

38) 日本外務省(2010)『開かれた国益の増進』,pp26-27.

39) 国際協力局 (2015.2)『開発協力大綱の決定』外務省.

40) 예를 들어, 「ODA削減に反対する議員」웹사이트, <http://yarakashita0311.wiki.fc2.com/wiki/ODA>

오랜 세월을 걸쳐 일본 정부가 강조해 온 ‘국익’추구는 단기적인 전략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경제상황에 매우 위약한 지지 층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재해에서 세계가 보여준 지원에 감동을 받고, 이를 다시 개발도상국에 환원하고자 하는 ODA 지지층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역으로 회의적인 ODA 여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이 탄탄한 ODA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보다 큰 공헌을 위해서는 국익을 넘어 인류 공동체적 관점에서 세계시민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ODA의 이념과 목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 ODA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ODA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은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한지 6년째 되는 해이다. 1월 11일 미국 세계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가 발표한 ‘2014년도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ODA 공헌도는 OECD-DAC회원국 27개국 중 8년 연속 최하위이다⁴¹⁾. 이제 막 출범한 ODA 신흥 원조공여국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향후 한국 ODA 발전을 위해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공여 규모는 OECD-DAC 회원국 평균 56억 달러에 비해 적은 액수지만 2010년 가입 직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13년 10억 4천만 달러⁴²⁾,

%E5%89%8A%E6%B8%9B%E3%81%AB%E5%8F%8D%E5%AF%BE%E3%81%99%E3%82%8B%E8%AD%B0%E5%93%A1, 2015년6월7일 검색.

41)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2014)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 2014 Results”, 웹사이트 <http://www.cgdev.org/article/commitment-development-index-cdi-2014-results>

42) 권율 외2명(2011) p.126.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⁴³⁾.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한국정부는 당해 한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0.05%인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끌어올릴 방침을 밝혔다⁴⁴⁾. 현재까지의 한국 ODA를 평가해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 양적 성장이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는 한편,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자리 잡지 않아 ODA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따라서 향후 한국 ODA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통합적·효율적 체제의 구축이라고 하겠다.

먼저 체제 구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국 ODA가 나아갈 방향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2014년에 출간된 ODA백서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첫 ODA 백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ODA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ODA의 목적과 이념, 기본원칙, 정책방향 등 ODA 실시에 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ODA의 이념과 목적이 불분명한 점은 ODA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ODA의 이념과 목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일본과 같이 ‘국익우선’을 제 1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ODA 지지 층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한국적인 가치를 이념과 목적으로 삼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ODA를 실시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한국의 과거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경험은 큰 의미를 지니고 한국 국민들에게 OD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실제 많은 한국 국민들은 ODA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⁴⁶⁾에 대한 이해가 부족

43) 손철(2015.1.9) 「정부, 올해 개도국에 2조 3800억 원 원조」『서울경제』. 백민정(2015.1.9) 「올해 정부개발원조(ODA) 2조3,782억 원…… 지난해보다 1,116억 늘어」『국민일보』.

44) 김윤태(2009.7.16) 「해외원조에 인색한 한국」『경향신문』.

45) 현대경제연구원(2013.11.01)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경제주평』 13-46. pp.1-17.

46) 2000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다. 당시 참여국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목표를 실행해 가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OD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지식 없이 실시되는 ODA는 일관적이고 흔들림 없는 국민의 공감대를 유지하기 어렵다. 일본도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은 수혜국이었으며 일본이 ODA를 시작했을 당시 이러한 이유를 국제협력의 동기로 이용했었다. 그러나 ODA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버블붕괴와 함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ODA지지율은 하락했고, 추락하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국익’ 강조는 일본의 ODA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확고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교육시스템의 확립과 실행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개발교육의 현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ODA를 단순히 홍보하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이 강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역과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의의와 가치가 있는가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한국 국민의 ODA 혹은 밀레니엄개발목표와 같은 중요한 정책이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크게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ODA 의의와 가치,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ODA와 비교해 약 40년 뒤쳐진 한국은 아직 정립된 ODA의 목적이 없고 ODA의 여론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초기단계에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ODA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적으며 체계적인 개발교육을 통해 OD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갈 충분한 여지와 시간이 있다고 하겠다.

데 동의했다. 8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③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 건강 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⑧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자세한 것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mdgoverview/>

47) 개발협력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29.2%는 ‘매우 중요하다’하고 답해, EU 회원국보다는 낮지만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90.9%로 EU 회원국보다도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다. 권윤 외2명(2011) p.126.

【참고문헌】

< 한국어문헌 >

- 권 울·박수경·이주영(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ODA정책 연구』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13.11.01)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13-46.

< 일본어 문헌 >

- 動く→動かす・国際協力NGO センター(2011.4.5)
『震災救援・復興と世界の貧困解消の両立のために「政府開発援助 (ODA)」 予算の維持を強く求めます!』.
エイズ&ソサエティ研究会議・アフリカ日本協議会 (2011.4. 25) 「2011 年度第 1 次補正予算に関する声明震災復興と世界の感染症対策の両立を = 世界エイズ・結核・マラリア対策基金への拠出見送りの再考を求めます」.
北野充 (2006) 「戦略的なODAをどう実現するか」、『GRIPS開発フォーラム』、GRIPS。
警察庁 (2015.1.9) 「東日本大震災について被害状況と警察措置」.
国際開発センター(2013) 「東日本大震災への海外からの支援実績のレビュー調査」.
国際協力局 (2015.2) 「開発協力大綱の決定」 外務省。
国際協力NGOセンター (JANIC) (2012) 「政府開発援助 (ODA) 予算の維持を強く求めます!」.
小浜裕久 (1992) 『ODAの経済学』 日本評論者。
鄭基淑(2009) 『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新しい国際協力のあり方—途上国の地域発展と自治体間の国際協力』 富士ゼロックス
小林節太郎記念基金2009年度研究助成論文, pp.11-19.
田中秀和 (2010) 「国際協力と国民的合意形成」 『季刊 政策・経営研究』.
塚本剛志(2004)
「我が国のODA世論の把握とその調査方法についての一考察—インターネットニュース記事選考分析から得られた我が国国民のODAに対する評価」 『外務省調査月報』 No.4.

- 中村安秀 (2012) 「海外からの共感と連帯」 『垣根のない連帯と共感』 .
日本 外務省(1995.2) 『外交フォーラム』 .
日本 外務省 「経済協力に関する世論調査平成23年度」 .
日本 外務省 (2011) 『世界が応援団一屈いたエール…日本とともに!』 .
日本 外務省(2004) 『政府開発援助白書』 .
日本 外務省(2006) 『政府開発援助白書-日本のODA50年の成果と歩み』 .
日本 外務省(2010) 『政府開発援助白書』 .
日本外務省(2010) 『開かれた国益の増進—世界の人々とともに生き、平和と繁栄をつくる—ODA 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 .
日本 外務省 (2011.5-7) 『わかる国際情勢!』 Vol.72-75.
日本 外務省 「ODAに関する世論調査平成23年度」 .
日本 内閣府(2011) 「平成23年度世論調査」
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2011.7.29)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基本方針」 .
福嶋博之(2011.6) 「4兆円規模となった平成23年度第1次補正予算—課題を残した復興財源の確保」 『立法と調査』 No.317, pp.26-32.
柴崎敦史 (2011.2) 「平成23 年度 (2011 年度) 政府開発援助予算~限られた予算の中での戦略的なODAを目指して~」 『立法と調査』 No.313 .

<영어>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4)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 2014 Result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9) “Public Attitude towards Development: TNS Report prepared for COI”.
ODA Watch (2012) “Shadow Report o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bmitted to the OECD/DAC Peer Review Korea 2012”.

<웹사이트>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saigai/shien.html/>

내각부대신관방정부홍보실:

<http://survey.gov-online.go.jp/h25/h25-gaiko/2-2.html>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www.cgdev.org/>

OECD/DAC : <http://www.oecd.org/dac/stats/>

OECD /Economic Outlook 94: <http://www.oecd-ilibrary.org/>

Publish What You Fund: <http://ati.publishwhatyoufund.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mdgoverview/>

<뉴스>

김윤태(2009.7.16) 「해외원조에 인색한 한국」 『경향신문』 .

백민정(2015.1.9) 「올해 정부개발원조(ODA) 2조3,782억원…… 지난해보다
1,116억 늘어」 『국민일보』 .

손철(2015.1.9) 「정부, 올해 개도국에 2조 3,800억 원 원조」 『서울경제』 .

秋田浩之 (2011.5.25)

「ODA削減、ケチは日本のためにならず」 『日本経済新聞』 .

朝日新聞 (2011.4. 7) 『「ODA削減し復興財源に」 民主党、内閣に申し入れ』 .

弟子丸幸子 (2011.4.15) 「西田国連大使 「ODA削減なら外交に支障」 『日本経済新聞』

日本経済新聞 (2011.4.20) 『貿易会会長、ODA予算 「震災後も削るべきではない」』

日本経済新聞 (2011.4.22) 『外相、ODA削減 「大変残念」』 .

CNN Wire Staff (2011.3.14) “Anxiety in Japan Grows as Death Toll Steadily Climbs”, CNN.

要 旨

On March 11, 2011, a magnitude 9.0 earthquake occurred near the Northeast coast of Honshu, Japan. The earthquake subsequently affected the Tohoku region (Northeastern Honshu) with a series of large tsunamis. However, this terrible disaster brought not only a huge amount of suffering, but it also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the Japanese people to strengthen sympathy and solidarity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people expected that the tremendous amount of support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uld change the Japanese people's negative views towa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cause them to rethink the significance of it.

My study is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Japanese public opinions on ODA after the Tohoku earthquake.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ODA budget among ruling-opposition partie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citizens, as well as an examination of the main factors leading to the conflict.

キーワード :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ohoku earthquake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